

지방자치단체,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지방자치분권·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 자금출자 근거 마련
- 고시 제·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본격 추진

-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(지역활성화투자펀드)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월 9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의결되어,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.
 - 또한,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
- 한편,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·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·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(1,000억)과 산업은행 출자(1,000억),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(광역계정, 1,000억)으로 총 3,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.

-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,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,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*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예) 15개 사업 X 사업당 2,000억원(자펀드 +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·민간 투자)

-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,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‘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’을 개정할 예정이다.
-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,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에는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.
-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하고,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.
- 또한, 지역·민간 주도의 대규모 펀드사업과 중·소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.

- 고기동 차관은 “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”라며, “‘지역활성화투자펀드’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형석 (044-205-3501)
		담당자	사무관	강경국 (044-205-3522)



모두의일상이
안전한 대한민국
국가안전시스템 개편
종합대책(23.1.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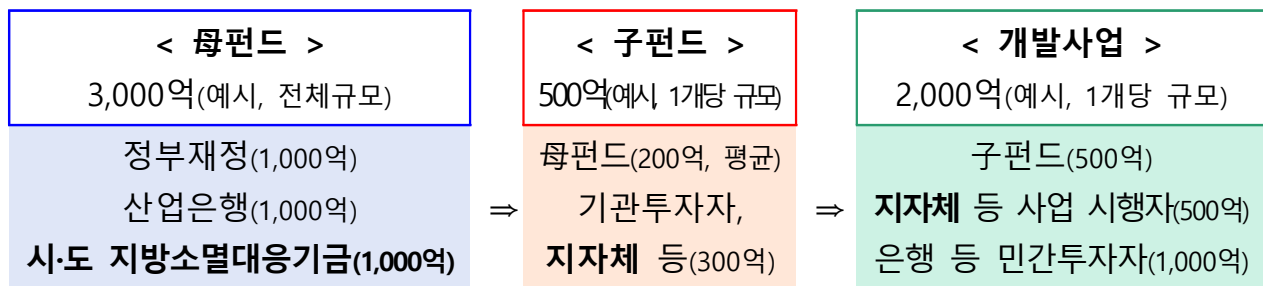


□ 추진 배경

- '22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한정되어 있어, 시·군·구당 70억원 내외의 단기·소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로 운용
※ 지역활력타운 등 부처 간 연계·협력 사업 추진 중이나 민간투자는 상대적으로 연계 부족
- 민간투자 연계 '지역활성화투자펀드(기재부 주도)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* 실현
* 기금 1,000억원 출자로 정부재정·민간투자 등 연계하여 약 3조원 펀드 조성
→ 기금 출자금액 기준으로 30배 이상 레버리지 효과 창출

□ 주요 내용

- (구성) 정부 산은·기금으로 모펀드 조성 후, 민간자금 연계 및 사업 추진



- (사업 규모) 모펀드 3,000억원 조성 시, 사업 규모 약 3조원* 추산
* (예시) 모펀드 3,000억원으로 자펀드 15개를 조성할 수 있고, 자펀드 1개가 출자되는 개발사업 1개 규모는 2,000억원 → 총 규모 3조원(사업 15개 x 사업당 2,000억원)
- (기금 출자규모) 펀드 도입 초기 추진동력 확보 및 타 재원 간 형평성*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(광역계정) 1,000억원 출자(모펀드)
* 정부재정·산업은행도 모펀드 조성에 각각 1,000억원 출자 예정(총 3,000억원)
※ 기금관리조합(한국지방재정공제회)이 시·도 기금(2,500억원) 중 1,000억원 先 출자
- (대상지역) 균형발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, 모든 비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 제외) 대상
- (기대효과)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민간 참여 유도 및 한정된 기금 재원의 한계 극복(규모의 경제 실현)